

#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하나의 시각\*

이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suklee@kdi.re.kr

## I. 머리말

보통의 경제학자들은 학문적 외도를 꺼려한다. 설사 스스로가 정치나 외교,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분야에 대해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물론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경제현상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름의 분석과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학자들이 익숙한 대수학과 기하학, 그리고 통계학적 사고가 접근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보통 경제학자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는 것을 더욱 편안해 한다.

그런데 이 글은 조금 특이하다. 우선 이 글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쓰고 있지만, 글의 주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에 관한 것이다. 분석의 대상 역시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물론 정치와 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질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더욱이 이 글에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대수학과 기하학, 그리고 통계학적 기법들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경제학자의 외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대상이 바로 이 글인 셈이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글의 특이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글을 계속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을 멈추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 본 글은 이석·조병구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보고서의 제2장인 이석,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의 기본사각 정립과 설명모형 구축」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부인하기 힘들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에 매우 일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중국경제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다시 이러한 안보질서에의 영향이 동북아의 경제분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러한 경제와 안보의 상호 규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각과 안보적 시각이 서로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경제학자들과 정치외교안보학자들이 서로 모여 집단적인 토론과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연구의 책임자였다. 그리고 연구의 책임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각각의 경제학자들과 정치외교안보학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하나의 단일한 평면 위에서 종합하는 일종의 ‘개념적 정련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수행된 ‘개념적 정련작업’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글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 의해 쓰여지면 서도, 글의 범위가 경제를 넘어 안보영역으로까지 확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토론한다. 국제질서의 기본 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누가 어떻게 주도하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3절에서는 동북아에 있어 중국의 부상이 기존의 동북아 국제질서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 가져오는가를 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을 경제와 안보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것이 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이러한 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시각 그리고 전략들을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네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이 글은 학문적 외도의 경험이 없는 경제학자가 안보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글의 곳곳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생경하고 설익은 주장들이 산재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글은 동북아의 질서 변화를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일반적 인식을 용감(?)하게 실천에 옮긴 흔치 않은 시도의 하나이다. 이 글이 너그럽게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 II. 국제질서의 구성과 변화요인

### 1. 두 가지 축과 중심 세력

현존하는 국제질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보는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가, 국제안보시스템 및 그에 연관된 주권국가들의 정치·외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가, 아니면 각 국가들의 문화나 스포츠, 인적 상호교류의 측면에서 살펴보는가에 따라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여러 분야들 가운데 특정 분야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무엇이 기존의 지배적인(prevaling) 질서인가에 대해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사실만큼은 쉽게 부인하기가 힘들 것이다. 첫째,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질서와 (정치·외교)안보적인 질서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현재까지 이러한 질서를 구성하고 유지해 온 중심 국가들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우선 <표 1>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세계의 총 GDP는 약 33조달러로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해 세계의 무역총량은 약 13조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GDP의 무역 의존도가 무려 38%에 달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이 생산한 총 GDP의 1/3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나라와의 교역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표 1> 2000년 현재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GDP 및 무역규모

(단위: 억달러, %)

	GDP		무역규모	
미국(A)	102,848	(30.9)	20,384	(16.0)
EU(B)	88,181	(26.5)	16,943	(13.3)
일본(C)	47,311	(14.2)	8,590	(6.7)
(A) + (B) + (C)	238,341	(71.5)	45,917	(36.0)
전 세계	333,213	(100)	127,544	(100)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 접속일: 2016. 12. 27).

말하면 현재의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든 국제적인 교역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각국 GDP의 40%에 육박하는 부분에 치명적인 손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참여하고 이들과 일정한 경제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현재 세계질서의 가장 중심적인 구성 부분의 하나가 바로 국제적인 경제질서임을 뜻한다. 세계 각국이 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국제적인 경제질서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존하는 세계질서는 하나의 거대한 안보질서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실제로 현재의 세계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들을 중심으로 강대국 간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적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동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국제질서는 이념과 노선을 같이하는 각 개별 국가들의 집단적 안보체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EU와 일본 등 자유진영의 집단안보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제1세계)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및 아시아의 사회주의 집단안보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제2세계), 그리고 이들 모두에 속하지 않는 여타의 국가들(제3세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세계 안에서도 개별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 간·다자간 안보조약이 씨줄과 날줄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안보질서는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1세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진화과정을 통해 현재의 세계질서는 각국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제적, 지역적, 양자적 안보체제의 복합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세계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은 국가로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안보질서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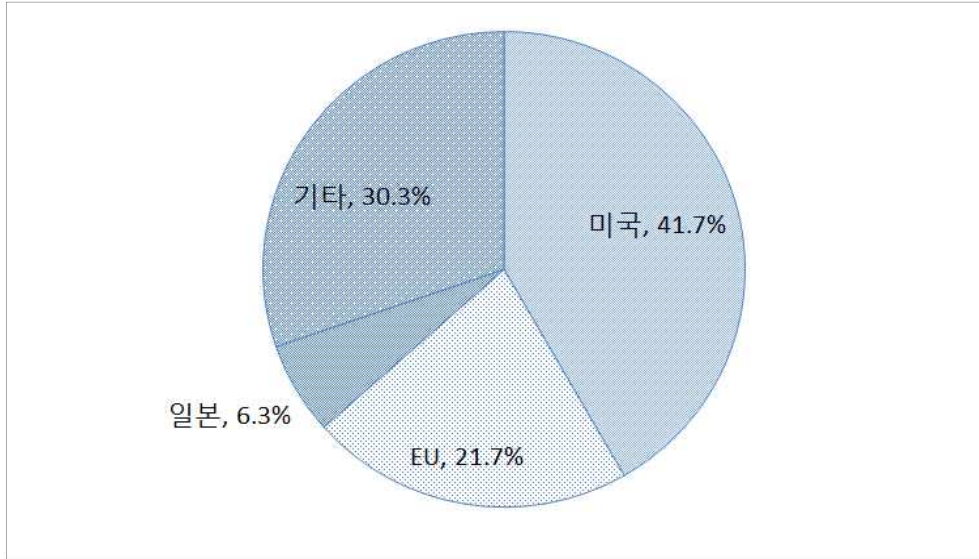
이처럼 현존하는 세계질서는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의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축 모두에 있어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발전시켜 온 중심 국가들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1>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2000년 현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EU와 일본의 GDP를 합치면 그 규모는 무려 24조달러에 달한다.<sup>1)</sup> 이는 같은 해 세계 GDP의 70%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이들 국가의 교역량은 약 5조달러로

1)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 속에는 한국과 같은 여타의 중요 국가들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관련 수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에는 유럽의 EU와 아시아의 일본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그림 1] 2000년 현재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세계 국방비 지출 대비 규모

(단위: %)



주: EU의 국방비는 2000년 현재 가입되어 있던 15개국의 국방비 합계임.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2015)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접속일: 2016. 10. 27)를 토대로 필자 계산.

전체 세계 교역량의 40%에 육박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세계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00년 현재 미국이라는 단 한 나라의 국방비 지출규모가 세계 전체의 국방비 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개별 국가의 군사력이 국방비 지출규모와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이는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가 세계 전체와 전쟁을 치를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에 EU와 일본 같은 다른 동맹국들의 국방비와 군사력을 더한다면, 사실상 세계에서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여타의 군사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현존하는 세계질서의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와 안보 모두의 측면에서 여타의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앞서서와 같은 몇 가지 매우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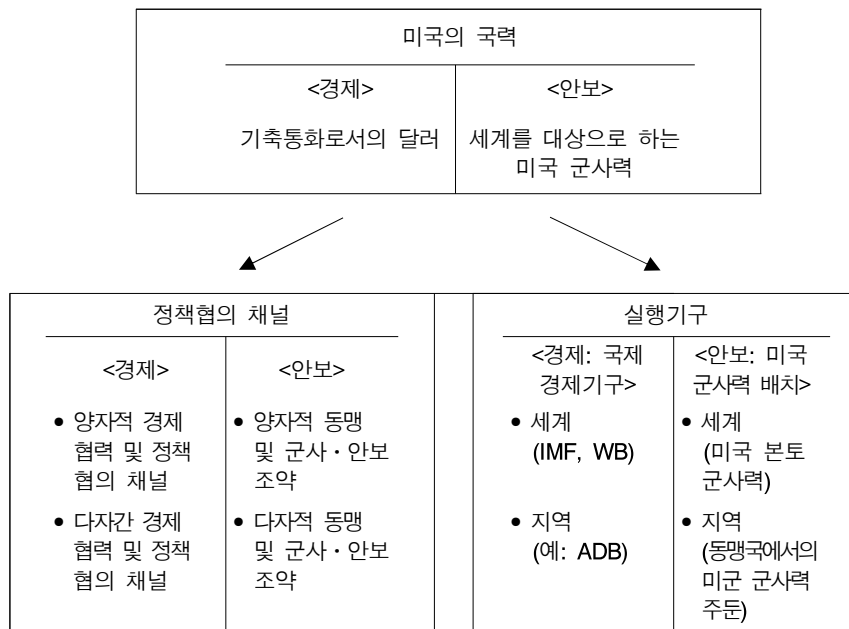
## 2. 질서 유지 메커니즘: 제도와 전략

그런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현재의 세계질서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경제와 안보의 측면 모두에서 서로 놀랄 만큼 유사하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그림 2). 현재의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국제거래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발행은 국제적인 기구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미국이라는 단일국가가 사실상 세계경제에 대한 발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이러한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상대적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국제경제기구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은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보유한

[그림 2] 국제질서의 유지 메커니즘: 경제 vs. 안보



최대 주주의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이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sup>2)</sup>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계의 통화당국으로 기능하는 미국이 세계에 대한 스스로의 정책실행기구로서 IMF와 World Bank 같은 국제경제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제경제기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국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경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IMF 및 World Bank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이 존재하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동맹국인 일본이 실효적으로 통제한다. 따라서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정책실행기구는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세계적 차원의 국제경제기구와 미국의 동맹국이 통제하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경제기구로 양분되어 있다.

한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계경제와 관련된 스스로의 다양한 정책적 협의 및 개입 채널 역시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위 G7으로 불리는 선진국들의 협의 채널이나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이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다양한 양자적·소다자적 지역적 정책협조 채널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세계경제를 유지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은, 매우 단순화시켜 살펴보면, 기축통화로서의 미국의 달러화와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로 이루어진 정책실행기구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상호 간 또는 여타 국가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 채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채널이 현재 세계경제질서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많은 제도와 합의들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근본적 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안보질서의 측면에서도 사정은 매우 흡사하다. 우선 안보의 측면에서 경제에서의 달러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그 자체이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력은 그 활동이 미국 및 주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계의 모든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는 물론 각 지역 동맹국들에게도 동시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 IMF 및 World Bank가 존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ADB와 같은 국제기구가 존재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의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꾀하는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는 물론 지역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동맹국에 주둔하여 세계와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현존하는 국제안보질서를 유지하고

2) 현존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IMF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과 같은 중요 사안에 있어 이른바 85% 규칙을 적용한다. 전체 회원국이 보유한 지분의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사안이 가결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은 IMF 지분의 18%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다. 더욱이 IMF와 비교되는 World Bank의 경우 IMF의 회원국만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IMF와 World Bank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사실상 미국의 실질적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적·정책적 개입 채널이 존재한다. 미국 및 동맹국들 사이의 제반 안보동맹 조약을 위시하여, 이들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군사협력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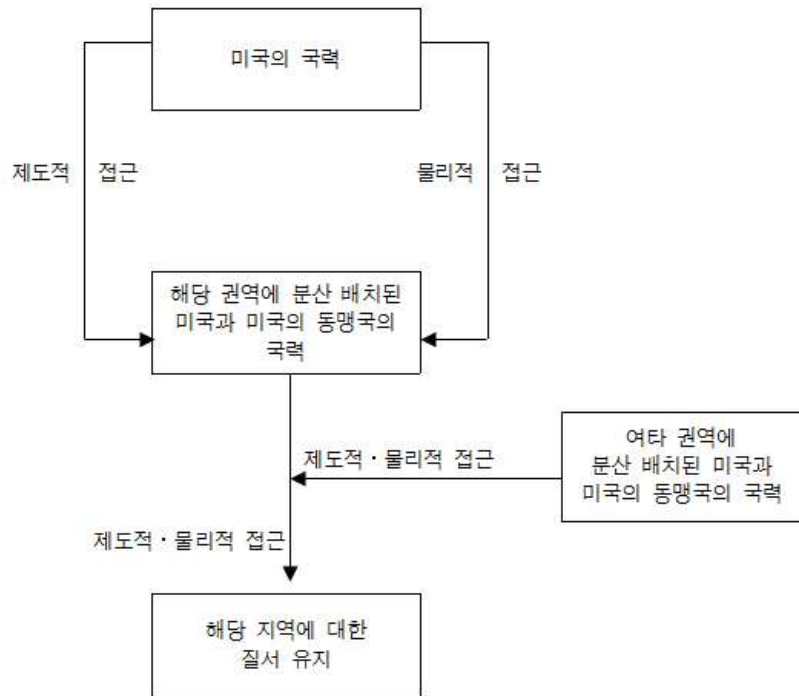
이처럼 국제적인 안보질서의 측면에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의 미국 본토 및 동맹국에의 동시 주둔이라는 군사적 실행 기제, 그리고 이들 내부 및 여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위조약과 군사협력시스템이라는 군사적 개입 채널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 세 가지 채널이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세계안보질서를 생산하고 또한 유지시키는 기본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메커니즘은 특정의 국가전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국가전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겠지만, 약간의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이를 표현한다면, 아마도 그 전략은 '접근(Access)'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예를 들어 안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 만일 미국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처음에는 대상 지역에 가장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치 않다면 이후에는 미국의 본토 또는 여타의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기에 가세할 것이며, 이에 더해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차원의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력 역시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세와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역외의 군사력이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사력은 물론 최종적인 군사활동 대상 지역까지 접근이 가능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계의 각 지역에서 거의 언제나 반복적인 군사훈련을 수행하며, 이러한 훈련의 목적과 내용은 주로 추가로 가세하는 군사력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전개와 접근경로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3)</sup> 그리고 이는 앞서서와 같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안보적 메커니즘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 경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3) 이에 대해서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보고서의 제4장인 조남훈,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과정과 결정요인 분석」을 참고하라.

[그림 3]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 접근(Access)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IMF 및 World Bank와 같은 국제경제기구는 물론 해당 지역 및 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채널이 가동된다. 또한 이 경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정책적 제안을 형성해 해당 지역 및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개입하고자 시도한다. 이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앞서의 군사적 개입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 3. 질서 변화의 요인

이처럼 현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압도적인 힘(군사력과 달러)과 이러한 힘의 실행기구(군사력의 세계적 배치와 국제경제기구) 및 개입 채널(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협의 채널)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질서 유지 요소들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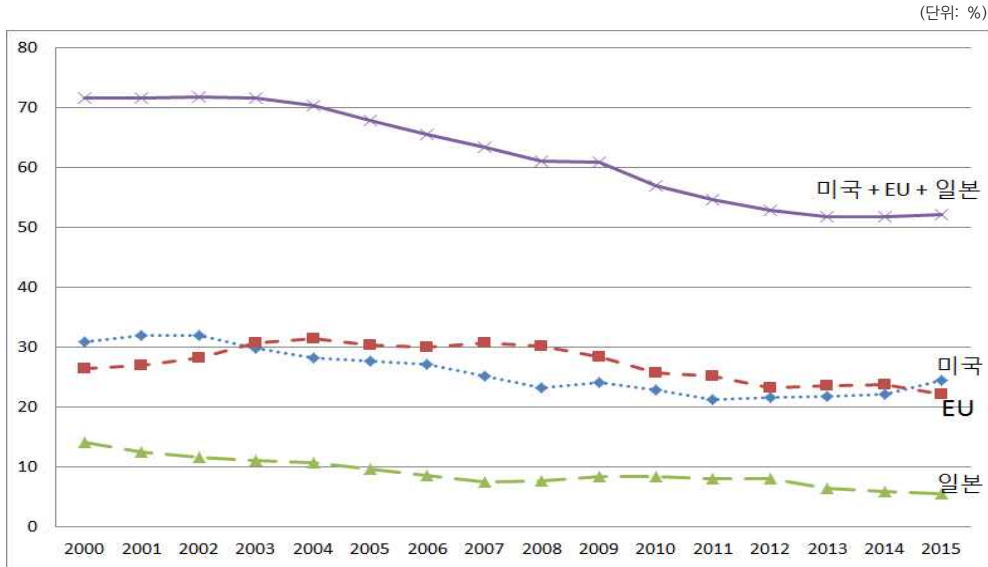
요소들을 주로 접근이라는 개념을 통해 배합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존의 세계질서는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일종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기존의 질서에 대한 크고 작은 교란요인은 언제나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 이후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재건과 기존 질서에 대한 일정한 도전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이후 이행기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던 러시아가 2000년대 후반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매개로 경제적인 체력회복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EU 및 여타의 동유럽 지역과 정치·군사적인 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미국과 서방의 보호를 받는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을 강제로 병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당연히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세계질서에서 쉽게 용납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토대로 기존의 세계질서가 중대한 변화의 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는 주장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그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이나 유럽(EU) GDP의 거의 1/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기존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루는 경제질서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취약점을 내포하였다. 러시아 경제 자체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들 에너지의 국제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도전은 현존하는 세계질서에서 정치·군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 질서 자체의 변화를 예단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가스와 석유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 기술이 등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더욱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도전은 기존 질서의 변화를 촉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질서에 의해 스스로가 '불량국가' 또는 '취약경제'로 낙인찍히는 역효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교란요인이 아니라 기존 질서 자체의 변화를 몰고 올지도 모를 어떤 중대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크게 두 가지의 수치 또는 이들 수치의 추세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림 4] 미국과 동맹국(EU, 일본)의 세계 GDP에서의 비중 추이(200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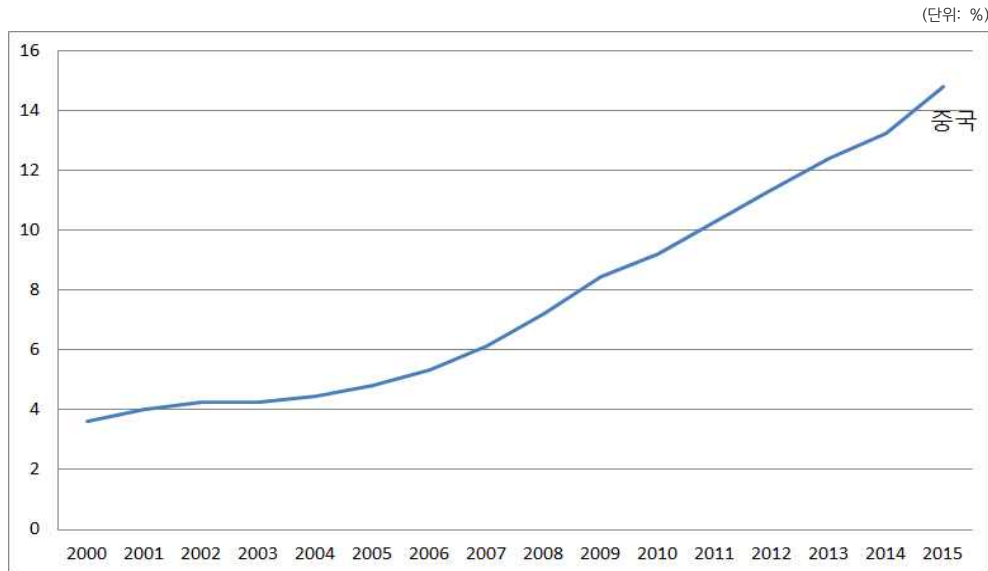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를 토대로 필자 계산.

우선 [그림 4]를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현재의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 비중은 2015년의 경우 세계 GDP의 52%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쳐 2000년대 초반의 72%에 비하면 무려 20% 급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15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치의 추세이다. 즉, 이러한 수치 자체가 현재 너무도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냄으로써 향후 그 수치의 정도가 더욱 하락할 것이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그런데 [그림 5]는 이러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수치 하락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의 5% 미만의 수준에서 2015년에는 거의 1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는 너무도 분명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수치를

[그림 5] 중국의 세계 GDP에서의 비중 추이(2000~15년)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를 토대로 필자 계산.

서로 합치면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해진다. 우리는 앞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현존하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이유가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여타의 다른 나라들을 크게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림 4]와 [그림 5]는 이들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의 비중은 홀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2015년 현재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비중이 과거처럼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세계질서의 주도권에 대한 언급이 옳다면 동일한 논리로 향후에는 세계질서의 주도권이 점점 더 중국에 치우칠 것이라고 말해야만 옳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추론은 현존하는 세계질서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 III.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변화의 다이내믹스

우리는 앞에서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와 안보의 국제질서는 서로 쌍둥이처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과거와 같이 압도적이지 않고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는 반면, 이들 국가에는 전혀 속하지 않는 중국의 힘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추세는 현존하는 국제질서가 어떤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 1.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 세계 vs. 동북아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논의의 차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만일 우리가 세계적 차원의 질서를 말한다면, 설사 현재 관찰되는 중국의 상승세가 추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세계질서가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주장하기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의 논의가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질서에 한정된 것이라면, 현재 관찰되는 수치와 추세만으로도 국제질서는 근원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편의상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수치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자.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15년 현재 중국의 GDP는 약 11조달러로 미국 GDP 18조달러의 60%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지난 15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이러한 양국

〈표 2〉 2015년 현재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의 GDP 비교

(단위: 억달러)

	GDP	무역규모
미국(A)	179,470	38,107
EU(B)	162,295	35,177
일본(C)	41,233	12,504
중국(D)	108,664	39,635
(A) / (D)	1.65	0.96
[(A)+(B)+(C)] / (D)	3.52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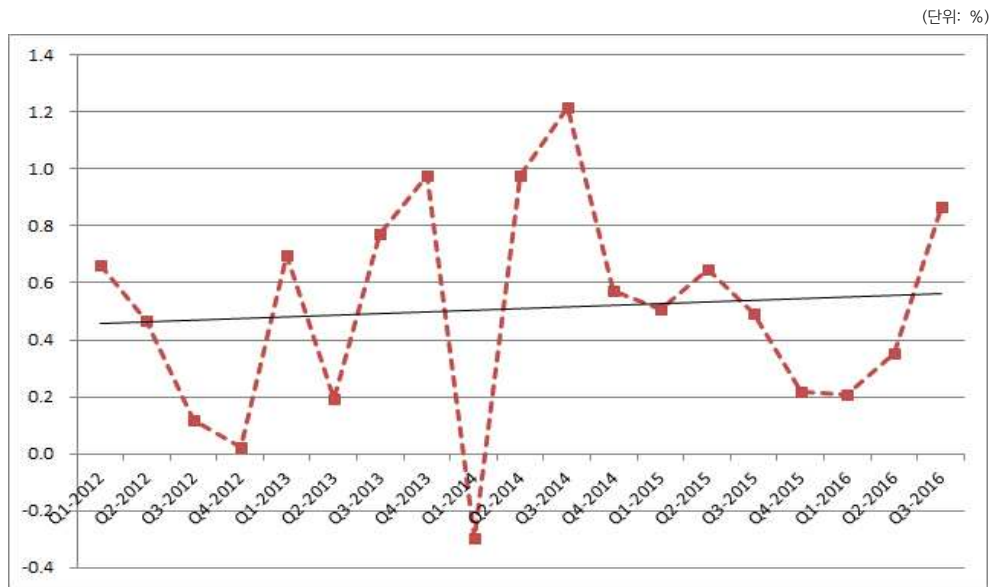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 접속일: 2016. 12. 27).

GDP 격차의 축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몇 배나 웃돌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응당 앞으로도 중국의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률을 상당 기간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놓고 보면 향후 언젠가는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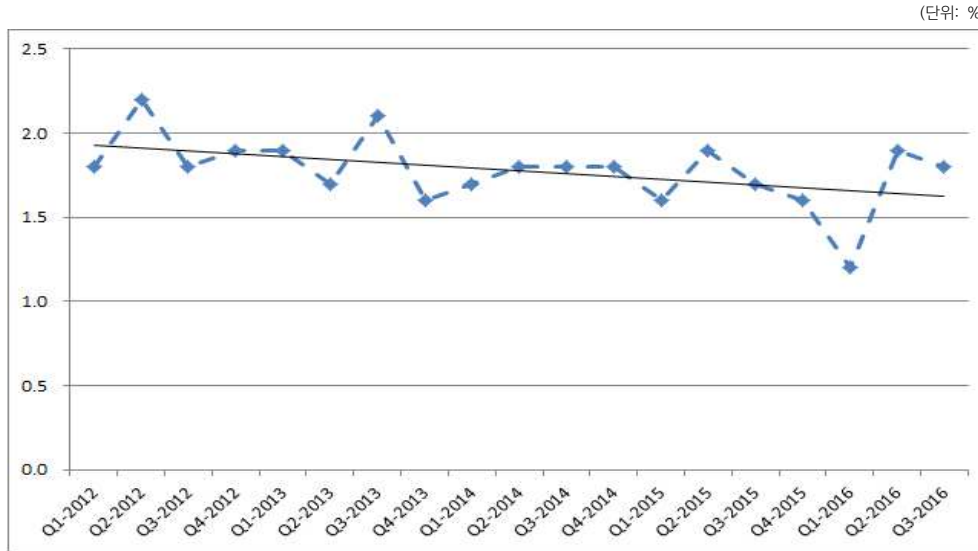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가 곧 중국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선 향후의 미국 및 중국 GDP 추세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이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듯이 최근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추세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2012년을 전후하여 완전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6~7% 정도로 내려앉은 실정이다. 이는 현재의 중국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경제에 도달하면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국은 그간의 한 자녀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의 하나이다. 향후 중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쉽사리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경제는 2008년

[그림 6] 2012년 이후 단기적 GDP 성장 추세: 미국(전분기 대비 성장률)



[그림 7] 2012년 이후 단기적 GDP 성장 추세: 중국(전분기 대비 성장률)



자료: OECD Stat(<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6. 12. 27).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나 2012~13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장률의 단기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중국의 성장률 수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을 둘러싸고 이러한 단기적 부침과 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양국의 GDP 격차 축소 속도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지를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 향방을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설사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서 기존의 경제 질서 또는 이에 대한 주도권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세계질서는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주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경우와 대비하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비록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현실적 내용이 기존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기존 세계질서 자체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단순히 중국의 GDP가 미국을 초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어도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합계 GDP에 비견될 정도로 비약적인 증대가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이 이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토대로 기존의 세계경제질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생각이 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과거의 세계질서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설사 후발국의 경제규모가 기존 패권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도권의 변화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었다.<sup>4)</sup> 특히 이 경우 단순한 GDP 규모가 아니라 1인당 GDP라는 생활수준 자체의 추월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만일 이러한 잣대를 현재의 중국과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적용하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현존하는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경제적 상승세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하락세가 지난 10여 년 동안 뚜렷이 관찰된다고 해서, 이것을 현존하는 세계경제질서의 근원적인 변화의 계기로 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우리의 시각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으로 전환하면 위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생산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적용되는 수치들은 위의 <표 2>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논의를 동북아라는 차원으로 한정하면 미국의 GDP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옳을까? 물론 <표 2>와 같이 2015년 현재 미국의 전체 GDP 18조달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이 체감하는 각국 GDP의 영향력 비교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지리적 거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의 체감 정도는 가까운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경우가 매우 다르다는 뜻이다.<sup>5)</sup> 따라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영향력 정도를 GDP 규모로 측정할 경우 여기에 적용되는 미국의 GDP는 동북아 지역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거리를 감안하게 되면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범위 역시 크게 축소된다. 이 경우 EU와 같이 유럽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논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3>은 하나의 가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체감하는 미국의 GDP 규모를 본래의 1/3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4) 이에 대해서는 1900년대 초반 세계적 대공황을 전후하여 전 세계의 차원에서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차원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힘의 역전이 발생하는 과정과 이의 실질적인 실현 계기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보고서의 제5장을 참고하라.

5) 지리 또는 지리적 거리는 국가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의 하나로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 매우 널리 채택되어 왔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국가 간 교역을 주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 설명하는데, 이 모형은 국가 간 교역량이 양자 사이의 지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직관에 기초하고 있다. 본문의 <표 3> 역시 이러한 방식과 직관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표 3〉 동북아 지역에서 체감하는 미국, 중국 및 일본의 가상적 GDP 추이

(단위: 억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A)	19,932	25,547	34,283	43,646	49,881	51,726	53,851	55,544	57,827	59,823
일본(B)	31,037	53,339	47,312	45,719	54,987	59,090	59,573	49,089	45,962	41,233
중국(C)	3,590	7,320	12,053	22,686	60,397	74,924	84,616	94,906	103,511	108,664
[(A)+(B)] / (C)	14.2	10.8	6.8	3.9	1.7	1.5	1.3	1.1	1.0	0.9

주: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 국가라는 점에서 본래의 GDP 규모를 그대로 가져왔으며, 미국은 동북 지역에서 바라 본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본래 GDP의 1/3 규모로 축소된다고 가정하였음.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고려한 결과이다. 하나는 미국의 경우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체적인 국력을 세계의 각 지역의 GDP 비중으로 골고루 분산하여 투입한다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각 지역에 대한 군사력(인력) 배치규모이다.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력은 이러한 군사력 배치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가정이다.<sup>6)</sup>

그런데 〈표 3〉의 수치들은 만일 이것이 현실 적합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고 심지어는 조금 놀랍기까지 하다. 우선 이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국의 GDP는 11조달러인 반면, 동북아 국가들이 체감하는 미국의 GDP는 6조달러에 불과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인 일본의 GDP는 4조달러에 불과함으로써 중국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GDP를 합치는 경우에도 중국의 GDP 11조달러와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시각을 동북아로 한정하는 경우 2015년에 이미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과 일본 각각의 경제규모는 물론, 심지어는 이들 양자의 경제규모를 더한 합계 경제규모 역시 초월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동북아의 경우 중국의 국력은 경제규모라는 측면에서 기존 질서의 주도 국가들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 3〉은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5년간 이들 각각의 경제규모 추세 및 이의 근거가 되는 성장률 추세가 직관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중국의 1인당 GDP는 미국 및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규모가 설사 이들 미국과 일본의 합계 경제규모를 능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동북아 질서의 패권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표 3〉의 수치들은 적어도 동북아에

6) 본문의 〈표 3〉에서도 동북아의 미국의 동맹국으로는 일본 한 나라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의 각주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편의적인 이유 때문이다.

서는 현존하는 질서의 변화 또는 주도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변화의 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미국 및 동맹국의 상대적 침체와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의 시점에서조차 기존 질서의 변화를 압박하는 기본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 2. 동북아 질서 변화의 접촉면과 전선 1: 경쟁과 갈등

이처럼 현존하는 국제질서는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동북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변화의 계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그림 8]는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시아의 해상선(Sea Lane)이라고 알려진 하나의 선을 표시하고 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러한 해상선은 지난 50년간 아시아의 중요 교역 통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해 왔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에서 생산된 수출상품들이 이

[그림 8] 아시아의 해상선과 동북아 각국의 구도



선을 통해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수출되었으며, 또한 반대로 이 선을 통해 중동의 석유와 유럽의 제품들이 동북아의 끝자락까지 수입됨으로써 이 지역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그림 8]에 표시된 해상선은 아시아 전역은 물론 멀리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핵심적 교역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해상선이 단순한 경제적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상선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결국 그와 관련된 군사·안보적인 수요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0여 년간 이러한 해상선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심이 된 국제적 군사·안보의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러한 해상선이 지나는 주요 요충지에 각종 미군 기지들을 설치하여 주둔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1990년대 이후 기존의 국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단일 패권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해상선 주위의 미군 기지들은 상당 부분이 철수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선 자체가 일종의 군사·안보적 수요를 낳는 국제정치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그림 8]에 그려져 있는 해상선이 한편으로는 교역 통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 국가들 전체의 정치적·군사적 평화와 직결된 안보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는 앞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현존하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방식이 바로 '접근'전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그림 8]의 해상선에 적용하면, 이 선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시아의 기존 안보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전개하거나, 더 나아가 여타 지역에 존재하는 미국의 군사력을 아시아로 전개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접근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그림 8]의 해상선이 기본적인 준거점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와 관련하여 <표 4>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바로 중국 경제력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제력의 증대는 곧 중국의 대외교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여전히 중국의 경제력이 미미했을 때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대외교역의 규모는 30% 수준이었는데 반해,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는 2000년대 중·후반에는 대외교역의

〈표 4〉 중국의 GDP 대비 교역규모 추이(1990 vs. 2010)

(단위: 억달러, %)

	1990	1995	2000	2005	2010
GDP(A)	3,590	7,320	12,053	22,686	60,397
교역규모(B)	1,154	2,809	4,743	14,219	29,738
(B) / (A)	32.2	38.4	39.4	62.7	49.2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 접속일: 2016. 12. 27).

비중이 무려 GDP의 50%를 넘나들고 있다. 총량 규모 면에 있어서도 중국의 대외교역량은 1990년대 이후 2010년까지 거의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속도는 특히 2000년 이후 더욱 가팔라졌다. 실제로 1990년 1,154억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외교역량이 이후 2000년까지 10년간 4,743억달러, 약 4배 정도 증가했으나, 다시 이후 2010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2조 9,738억달러로 무려 6배 정도 추가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교역의 증대는 1990년대 이후, 보다 정확하게는 2000년대 이후 비로소 중국이 세계가 놀랄 만큼 본격적으로 바다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세계교역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란 결국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도 중국이 추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 8]에 그려진 아시아의 해상선은 이제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에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 상대적으로 여전히 폐쇄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바다로 나아가지 못했던 중국과 2000년 이후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으로 동북아의 질서에 변화의 계기를 만들 만큼 성장한 중국에는 이러한 해상선의 의미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의 해상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에도 중대한 변화의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이제 아시아의 해상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경제질서에 가장 커다란 이해관계와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반면, 이러한 기존의 질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것이다. 세계는 물론 아시아의 모든 교역과 투자, 금융과 같은 국제경제의 질서들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당연히 이러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변화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기존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적어도 중국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안보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소극적인 또는 방어적인 차원의 이유이다. 과거 중국은 적극적으로 바다로 진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세계, 또는 중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핵심적인 전선(front)은 결코 바다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대외교역을 지탱해 온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수요 역시 이제 바다로 확대되어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8]의 해상선이 이제 중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안보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상선은 현존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선은 현존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구사하는 '접근'전략의 준거점이기도 하다. 이는 한편으로 현재의 중국에게는 '중국과 세계, 또는 중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는 핵심적인 안보적 전선(front)'이 이제는 바다, 특히 아시아의 해상선이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해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안보적 전선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중국이라는 개별 국가가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구사하는 군사적 '접근'전략의 핵심적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의 기존 안보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아시아의 해상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안보질서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또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기존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위주로 형성된 국제적인 안보질서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안보적 위협을 감소시키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기존 안보질서에 대한 변화를 매우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의 바다에 대한 제해권은 이를 이용하는 국가들의 경제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좌우되어 왔다. 바다를 이용하는 개별 국가의 경제력이 클수록 그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크게 행사해 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교역 국가이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동북아의 차원에서는 중국의 총체적 경제규모가

이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합계 경제규모를 추월하고 있는 추세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향후 당분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그림 8]에 나타나 있는 아시아의 해상선을 둘러싼 제해권은 앞으로 더욱더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아시아의 해상선을 둘러싼 제해권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군사·안보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만일 아시아의 해상선을 둘러싼 우월적 제해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안보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우선 스스로의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해상선에 대한 우월적 제해권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동북아의 군사·안보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적극적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를 뛰어넘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안보적 변화를 몰고 올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 3. 동북아 질서 변화의 접촉면과 전선 2: 협력과 적응

이처럼 [그림 8]에 나타나 있는 아시아의 해상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결국 현존하는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반드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이 완전히 적대시하여 서로 간의 항상적인 경제·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미국(동맹국 포함)과 중국 사이의 협조를 유도하여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차원의 보다 조화로운 질서로 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질서의 중심 세력인 미국과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 모두가 충분히 만족하고 적응(accommodate)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미 언급했지만, 현재와 같은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바다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은 [그림 8]에 나타나 있는 아시아 해상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의 하나이며, 이는 앞으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스스로의 경제적 부상을 토대로 기존의 동북아 경제 및 안보 질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자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항상적인 충돌이 야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이 경우 중국경제 역시 상당한

충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의 대외경제는 결국 이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중국은 1인당 GDP가 1만달러 내외에 불과한 중진국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추가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 같은 선진국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입장에서는 기존 질서의 중심 세력인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 갈등과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화합과 협력을 추구하려는 매우 분명한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화합과 협력의 요인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현재 동북아의 측면에서는 중국의 힘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지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양자의 격차가 매우 뚜렷하다. 이는 세계적인 차원의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중국의 국력이 크게 미약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적인 차원의 안보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과연 동북아 차원의 안보질서 변화만이 전면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동북아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예상만큼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시각에서도 이처럼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동북아의 기존 안보질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정도로 기존의 안보질서를 조정(adjust)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대표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입장에서도 협력과 화합의 유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중국은 이들 국가를 포함한 세계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와의 갈등과 대립을 지속할 경우 자신들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요인을 기존의 질서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입장에서도 더욱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의 약진을 인정하고, 이를 기존의 안보질서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다.

#### 4. 동북아 질서 변화의 형식과 내용: 전략의 충돌

이처럼 아시아의 해상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현존하는 동북아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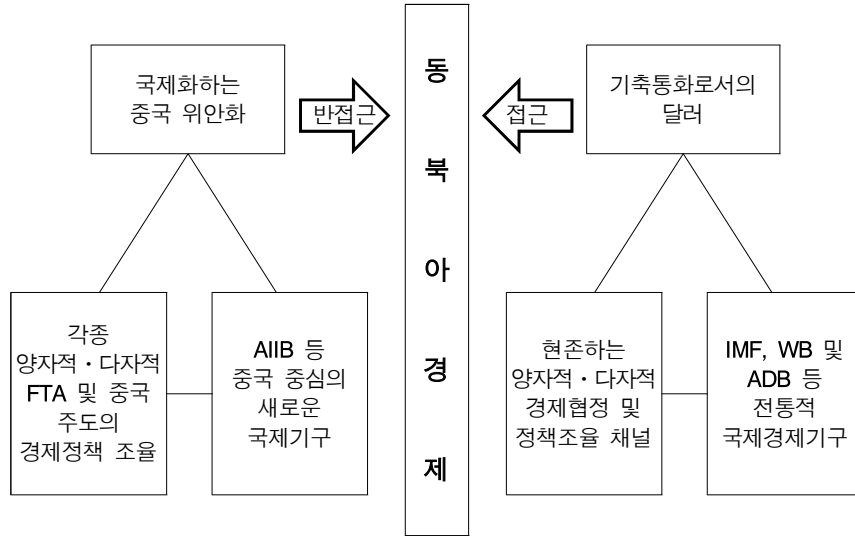
및 안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중국과 기존 질서의 중심 세력인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이 언제나 대립과 갈등을 키워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는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중국과 기존 질서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가 갈등하고 경쟁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질서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무리 복잡적이고 그 결과가 아무리 가변적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존하는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 자체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의 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북아 질서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 동북아의 기존 질서와 중국의 부상은 경제와 안보 각각의 분야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서로를 마주보게 될까?

우리는 앞에서 현존하는 동북아 질서의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세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전략은 ‘접근’이라는 단어로 묘사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와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경제와 안보에서의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력)과 이러한 국력의 실행(협력)기구(IMF, WB, ADB 등의 국제경제기구, 미국과 동북아의 일본 등에 분산 배치된 군사력) 및 다양한 정책적 개입 채널(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경제협의 채널, 각종 군사·안보조약과 협력시스템) 등 세 가지의 질서 유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질서의 모습을 환기하게 되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경제·안보 질서의 변화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는 비교적 자명해 보인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현존하는 동북아의 질서를 스스로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아마도 무엇보다 미국의 기본적 질서 유지전략인 접근전략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중국의 부상이 지속될 경우 동북아의 경제·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의 접근전략의 핵심적 대상이 바로 중국으로 설정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기존 질서의 압박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스스로에게 향하는 미국의 접근전략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room)’을 확보하고, 점차로 이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질서를 중국 친화적으로 변모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일종의

[그림 9] 전략의 충돌 1: 경제



‘반접근(Anti-Access)’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접근전략이 채택될 경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접근전략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 실행 메커니즘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일 것이다.

우선 경제적인 질서를 생각해 보자. 이미 지적한 것처럼 동북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로 상징되는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이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접근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고자 한다면 미국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동북아 경제질서의 차원에서 각인시켜야만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현재 세계의 최대 교역국이며 동북아 각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이들의 대미 의존도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북아 경제질서의 차원에서 미국에 상응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각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마치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것처럼 적어도 동북아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위안화 역시 달러에 못지않은 국제통화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2015년 IMF의 공식 통화 바스켓에 중국의 위안화가 포함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동북아 무역에 있어 위안화의 결제비율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동북아 국가들을 상대로 위안화 차관이나 위안화에 기초한 통화 스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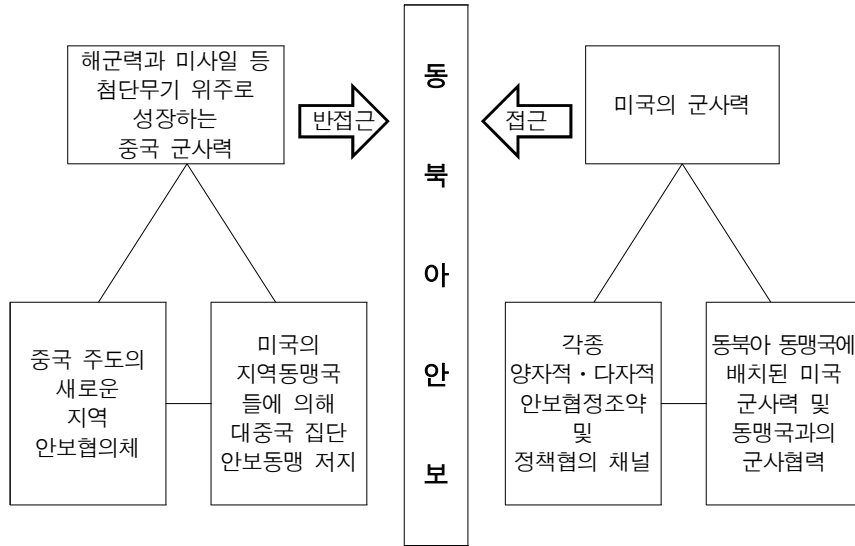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전반에 있어 제도적으로 위안화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접근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IMF, WB, ADB 등과 같은 국제경제기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중국 역시 현재 이러한 기존의 국제경제기구에 중요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기구에서 중국이 미국 및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적어도 동북아에서 이들 국제경제기구에 대응하여 중국의 경제적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13년 이후 자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 Investment Bank: AIIB)을 설립하여 현재 초기 운영에 돌입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AIIB는 내용과 기능에 있어서는 기존의 ADB와 매우 흡사하며, 형식과 운영에 있어서는 IMF와 World Bank 등 세계적 차원의 국제금융기구와 유사하다. 이는 중국이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경제기준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에서 자국에 의한 경제질서의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금융기구의 형성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 기체로서의 IMF, WB, ADB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상대하기 위한 중국 나름의 대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접근을 현실화시키는 또 다른 제도적 축의 하나인 미국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다양한 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정책협의 채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협의 채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설사 동북아 경제 전반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개별 국가 차원의 미시적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한편으로는 동북아 각국을 상대로 개별적 FTA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중국 주도의 MEGA FTA의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각국 경제에 대한 정책적 협의 채널의 구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동북아의 안보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 무엇보다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접근전략은 전 세계의 바다를 통제하는 막강한 해군력에 기초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근거하고 있다(그림 10).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전략은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접근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해상선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정치·

[그림 10] 전략의 충돌 2: 군사·안보



외교적으로는 동북아의 수많은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철회하거나 약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접근전략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보다 중국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방향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우선은 적어도 동북아의 차원에서 미국이 전개할 수 있는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적인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의 확대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접근전략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군력과 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중국이 일정 정도 제어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반접근 지역 방어전략(Anti-Access Area Defense: A2AD)’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중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력 전개를 일정 지역 밖으로 밀어내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등풍(東風)과 같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 해군전력을 겨냥한 전략 미사일 체계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안보적 측면에서의 반접근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의 증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적 동북아 접근전략의 물리적 기초가 되는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배치된 미국 군사력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은 결국 미국의 동북아 안보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각각은 군사적으로 용인하지만 이들 각각의 동맹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에 대해 중국이 공세적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에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보복조치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를 흘리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미국과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들의 군사협력체계의 강화를 억지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동북아 각국과 긴밀한 정책적 협의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한 기존의 협의 채널에 대응하는 방안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지역의 각종 안보협의 채널에 대응하여,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와 같은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아시아 지역 안보포럼(Asian Regional Forum)과 같은 다양한 국제안보협력기구에서 중국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하고자 하는 시도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의 변화는 기존의 질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이를 경제적으로 또한 안보적으로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반접근전략을 국가의 중심적인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접근전략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 메커니즘, 즉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력)과 이러한 국력의 실행(협력)기구(IMF, WB, ADB 등의 국제경제기구, 미국과 동북아에 분산 배치된 군사력) 및 다양한 정책적 개입 채널(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경제협의 채널, 각종 군사·안보조약과 협력시스템) 각각에 대해 이를 대체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결국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안보적 부상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기존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일정한 변화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북아의 기존 질서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근원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 5. 동북아 국가들과 아시아 패러독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갖고 있던 기존의 인식에 대해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그간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소위 경제와 안보의 분리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적 개방과 성장으로 인해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더욱 촉진되어 경제적으로는 더욱 조화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데 반해, 안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미국과 일본 등 중심 세력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를 다른 차원에서 표현하면, 동북아 국가들이 이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아시아 패러독스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그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안보 측면에서 동북아의 기존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으로 이러한 안보 측면의 변화를 지원하고 촉발시키기 위해 경제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존 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행국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있어 기존의 미국이 중심이 되는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유도하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들 지역 국가들 모두에게 동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동북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제까지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존 동북아 질서의 변화 계기를 주로 아시아의 해상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아시아의 해상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교역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이고, 세계의 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나라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소비지역의 하나로서 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보적으로 중국은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들 접경 국가들 거의 대부분과 영토 문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안보적 현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욱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질서에 매우 익숙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질서가 1945년 이후 무려 70여 년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북아 국가들 모두는 이제까지 기존의 질서를 주어진 국제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을 실시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경제·안보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생존환경이 변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존재하는 각각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 IV. 동북아 질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국가전략

앞 절에서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의 부상은 세계적 차원의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지만, 적어도 동북아 차원의 경제 및 안보 질서에 있어서는 이미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조짐으로 인해 동북아에 위치한 모든 개별 국가들 역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동북아 각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동북아의 중요 4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시각을 서로 대비시켜 살펴보도록 한다.

##### 1. 미국: 전략적 재균형<sup>7)</sup>

보통 동북아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라고 하면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몽골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여기에 러시아의 극동 지역 역시 포함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만은 현재 국제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이에 대해서는 이석·조병구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보고서의 제6장인 이상현, 「미국: 전략적 재균형과 미국 우선주의」를 참고하라.

또한 몽골과 북한은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들이다. 이들의 GDP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1/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북한의 핵문제와 같은 돌발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동북아 전체의 질서 변화에 어떤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동북아의 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미국과 더불어 기존 동북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축 국가들로서 기능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존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기존 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는 사실로 인해 동북아의 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대응은 그와 관련된 미국의 대응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대응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미국과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 전체의 차원에서 조율되고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들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이러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동북아의 질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이러한 대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에 기초하여 이들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시각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미국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존하는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으로 이러한 질서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에 가장 민감하고도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을 기존의 경제·안보 질서에 순조롭게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과 정책은 현재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2016년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전의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된 미국의 기존 전략이 크게 수정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수립한 동북아 전략과 정책은 충분히 의미할 가치가 있다. 이것이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기본적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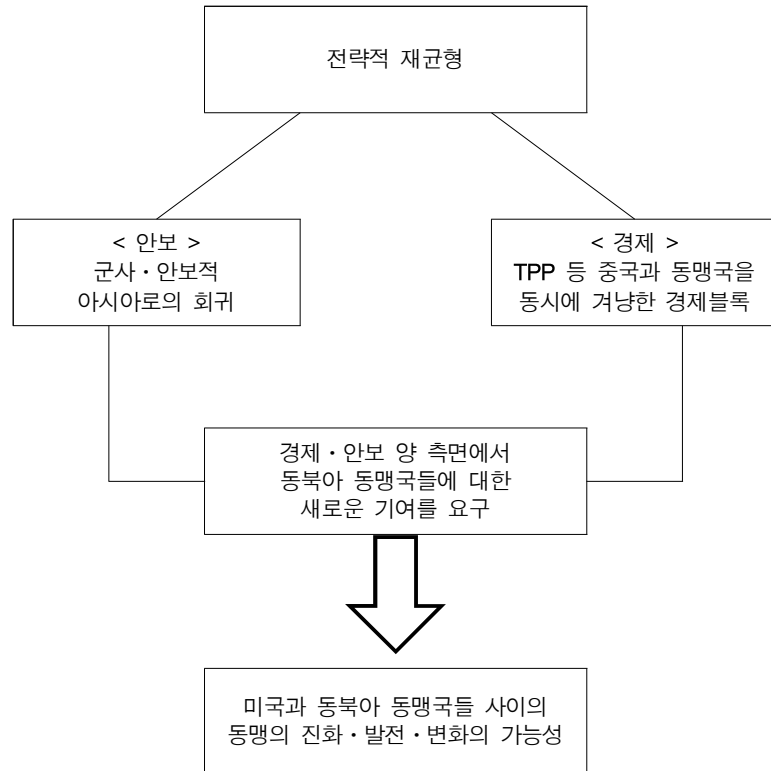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그간 미국이 수립해 온 전략과 정책은 동북아는 물론

이를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과 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의 재조정 결과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정책은 통상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e)’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중국의 부상이 있기 이전)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한 국력의 분포를 중국의 부상에 맞추어 새롭게 재배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으로 불안정해진 세계 각 지역의 힘의 균형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중국이 존재하는 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으로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의 미국의 국력을 투입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과 정책의 의미를 아시아로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것은 곧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시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국력과 관심의 투입을 통한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당연히 군사·안보와 경제 등 두 분야 모두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으로 시작되어 안보분야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 질서 모두에 변화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로의 회귀는 무엇보다 먼저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로의 집중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국 해군력의 60~70%를 아시아로 집중시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전략이 ‘접근’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즉, 미국 해군력의 대부분을 아시아로 집중시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접근전략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아시아로의 회귀’ 역시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0년 이후 TPP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TPP의 아시아 파트너 국가들로서 앞의 [그림 8]에 나타난 아시아의 해상선 주위의 주요 국가들을 포진시키고 있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이 안보는 물론 경제라는 또 다른 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동맹과 더불어(with allies)’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앞의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이 기존의 동북아

[그림 11] 미국의 동북아 전략 요약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아시아 또는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이들 동북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질서 유지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통로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국들의 통로 기능은 당연히 군사·안보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미국만이 아닌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일본은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할 때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을 일본이라는 동맹국에 더욱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배치와 더불어 동맹국인 일본 자체의 군사력 증대를 의미하

며, 심지어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대가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할 때에도 단순히 미국의 경제력을 아시아에 더욱 많이 투여한다는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아시아로의 경제력 투입을 일본과 같은 지역 내 동맹국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TPP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당연하고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파트너 국가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를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만의 단독 대응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국력만이 아니라 여기에 동맹국들 모두의 국력을 합친 일종의 종합 국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 역시 중국의 부상과정을 상기하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앞의 <표 3>에서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세계의 GDP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하락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격차 역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미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중심 국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스스로의 국력만으로 대처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력을 더욱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의 동맹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일본의 경우를 보자. 현재까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줄곧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최근까지 군사력의 증강에 많은 제한이 있었으며, 이른바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 타국과의 교전행위 역시 일종의 금기사항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한을 부여하는 원천은 바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다시 말해 미일 간의 군사동맹조약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겨냥하여 새롭게 내놓는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또한 이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은 이제까지 일본의 군사력에 제한을 가하던 미일동맹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미일방위조약이 개정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새로운 군사력의 확대와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기존 동맹국들 사이의 동맹의 내용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상황은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능하였다. 하나는 한반도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의 차원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 억지력 유지가 전자의 사례라고 한다면, 미국이 파병하는 세계 분쟁지역에 대해 한국이 공동 파병을 수행하는 것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을 겨냥한 새로운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한미동맹에 더해 하나의 차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또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차원의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한미동맹을 지역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한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한 지역적 차원의 동맹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일동맹과의 밀접한 관계설정 요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중국의 부상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는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바로 이 둘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합체시켜 단일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는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이 주로 한반도에 국한되어 왔으며, 또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의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친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제반 관계와 기능들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미국의 기존 방침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 일정한 수정을 거칠지도 모른다. 실제로 현재 트럼프 진영은 그간 미국이 추진하던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존재한다.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현존하는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전략과 정책들을 계속하여 개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들은 현재의 국제질서 구조상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2. 중국: 신형국제관계<sup>8)</sup>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기본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의 유지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은 앞서와 같은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에 의해 일종의 집단적 대중국 포위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년 시진핑의 등장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신형대국관계 또는 신형국제관계를 강조하고 있다.<sup>9)</sup> 이는 간단히 말해 적어도 동북아 차원에서는 이제 중국이 새로운 중심 국가의 하나로 등장했으니만큼 ‘기존의 중심 국가인 미국과 서로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가 침해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익을 영토 및 주권과 같은 ‘핵심 국가이익(Core National Interest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제·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해군력과 미사일 등 첨단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미국의 지리적·군사적 대중국 접근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그림 8]에 나타난 아시아의 해상선을 중심으로 군사적 항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각종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이른바 구단선과 같이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체 방위선을 설정하여 이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TPP와 같이 중국을 겨냥한 경제블록의 형성에 대응하여 중국이 주축이 되는 아시아 각국과의 개별적·다자적 FTA의 창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만일 미국이 TPP의 결성을 실행한다면 중국 역시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FTAAP 및 RCEP을 창설하여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접근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중국적으로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집단적 경제·안보 공동체로 구체화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물론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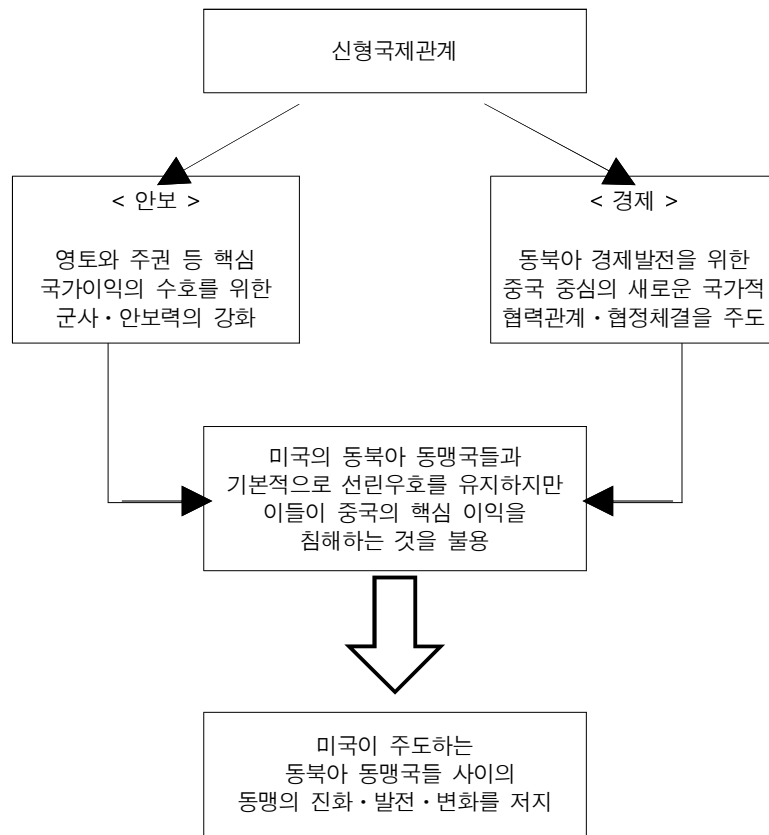
8) 이에 대해서는 이석·조병구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보고서의 제7장 인 이동훈, 「중국: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를 참고하라.

9) 현재 중국의 대외적 국가전략은 통상 '신형대국관계' 또는 '신형국제관계'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들 두 단어 가운데 최근 후자가 더욱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도 우리는 '신형국제관계'라는 용어를 차용한다. 실제로 이석·조병구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제7장에서 중국 국가전략을 신형국제관계라는 용어로 집약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동북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이들 모든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 역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로 나아간다면 이는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림 12] 중국의 동북아 전략 요약



예를 들어 중국은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맹관계가 단순히 안보적인 차원을 넘어선 경제 및 사회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이라는 현실 역시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각각 별개로 존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 모두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안보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이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는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은 만일 동북아 국가들이 이러한 집단적 대중국 압박에 참여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치적·안보적 경제적 보복 역시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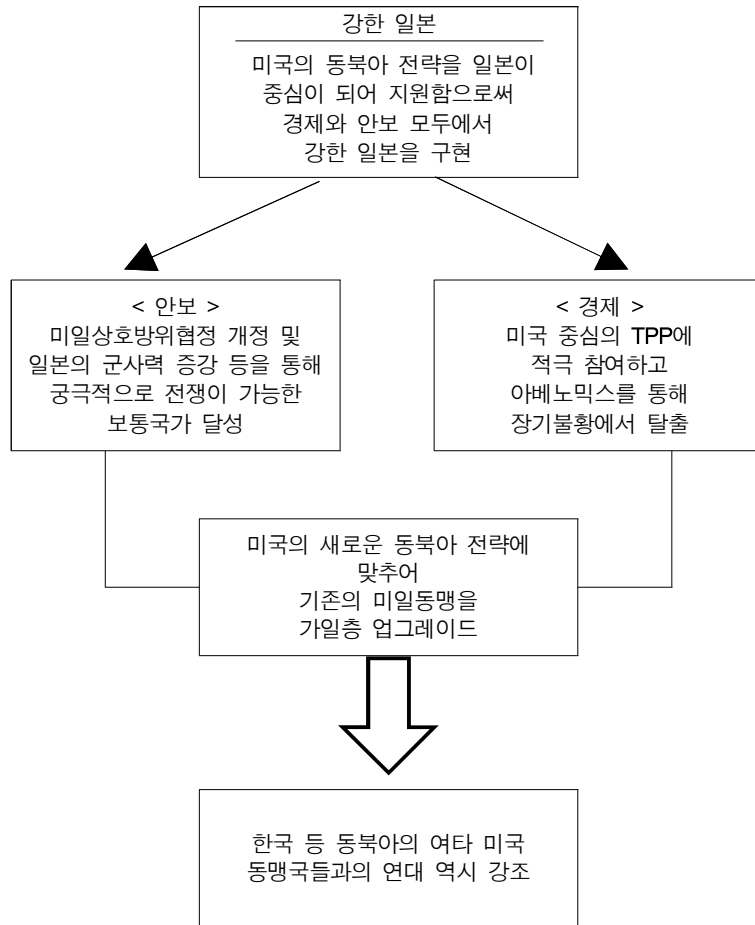
이처럼 동북아의 질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여타의 동북아 국가들 모두에 대해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여타의 동북아 국가들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 모두는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 있어 동시에 매우 중요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과 시각을 갖고 있을까?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과연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을까?

### 3. 일본: 미국을 통한 강한 일본의 형성<sup>10)</sup>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동북아의 질서 변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벌일 경우 일본은 경제와 안보 모든 면에 있어 철저히 동맹국인 미국의 편에 서서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한편, 일본의 국가이익 역시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른바 ‘강한 일본’ 또는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군사·안보적으로 기형적인 상황을 강요받았고, 이에 따른 경제와 안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아시아에서조차 진정한 지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일본의 위상을 현재와 같은 동북아의 질서 변화 시기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관건이 되는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서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토론은 조병구·이석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2017의 제8장인 이원덕, 「일본: 보통국가 일본과 경제의 대전환」을 참고하라.

[그림 13] 일본의 국가전략 요약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보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며, 일본이 군사적 침공을 받기 이전에는 전쟁 역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평화헌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모든 안보는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안보적 제한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을 수행하는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이 패전국인 일본의 군사적 도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 이처럼 제한적이고 보호적인 군사·안보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안보시스템으로 인해 일본은 전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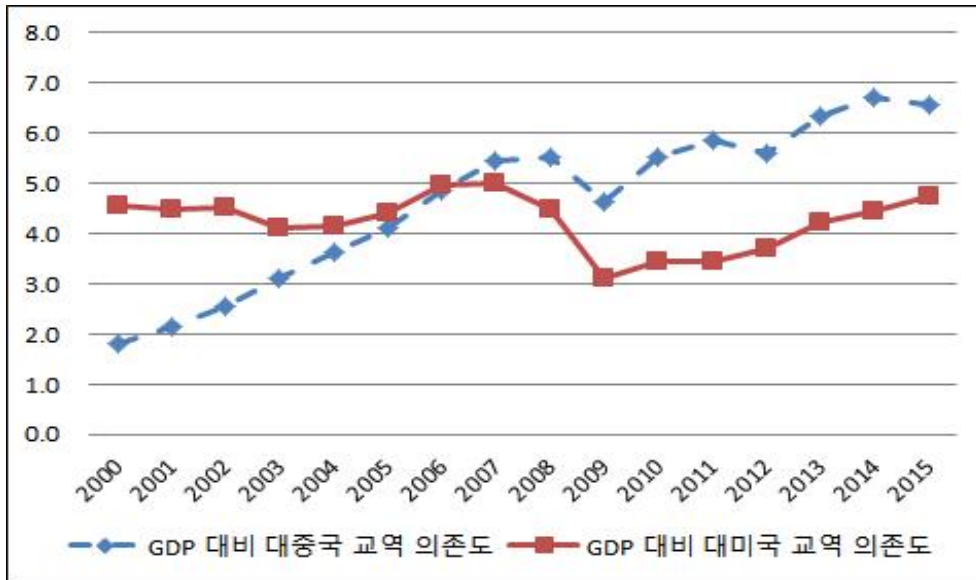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또는 동북아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기존 안보시스템의 한계를 탈피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 또는 ‘강한 국가’로서의 일본을 재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동북아의 질서 변화의 시기가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군사·안보시스템을 제어했던 미국 스스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군사·안보적 역할 증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경우 자연스럽게 기존의 제한적 군사·안보시스템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원하는 ‘보통국가’로서의 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위해 일본은 2010년 이후 급속한 방위비의 상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확대는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안보적 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무기체계 또한 미국의 무기체계를 수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미국과 조응하는 군사력의 확대를 기반으로 그간 일본의 안보시스템에 부과되어 있던 제반 군사적 제한사항들을 조금씩 완화하려는 노력 역시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4년 미일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통해 그간 자국에게 부과된 이른바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도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교전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아시아의 여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그간 논란을 빚어 왔던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의 군사·안보시스템에 근원적인 제약이 가하던 평화헌법을 수정함으로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을 재구축하겠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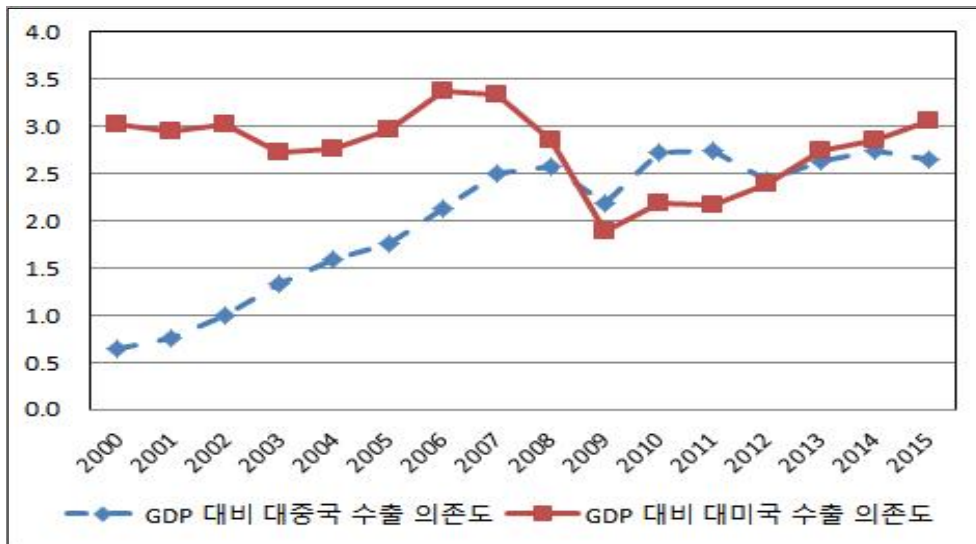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군사·안보적 재편과 더불어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TPP에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멤버 국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의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이 개방을 주저하는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반발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14] 일본의 대미국 및 대중국 교역 의존도 추이

A. GDP 대비 교역 총량



B. GDP 대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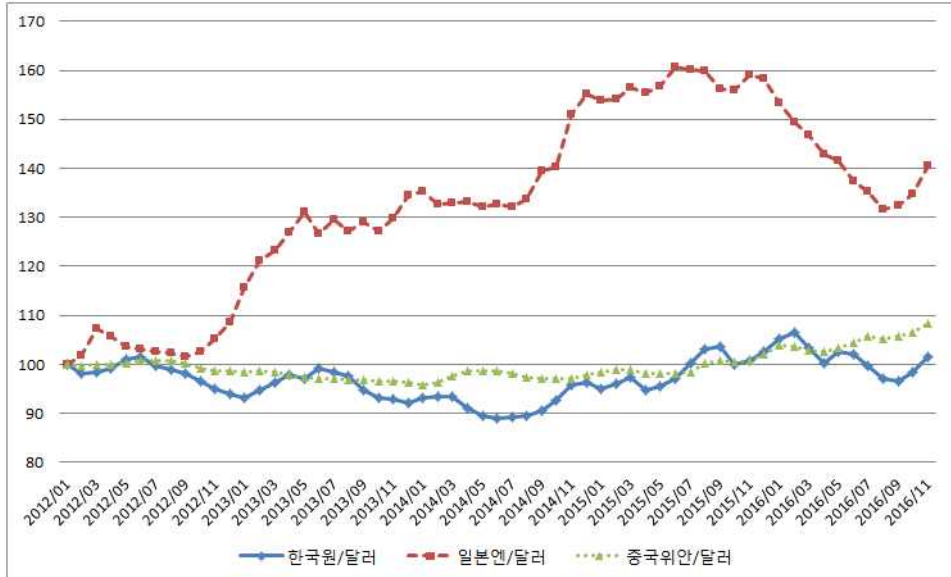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 접속일: 2016. 12. 27).

일본정부는 2010년 이후 이러한 국내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TPP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로 이를 타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어 일본이 누구보다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새롭게 주창한 AIIIB에는 아시아의 중요 국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기존의 경제질서 밖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발족시키는 것에 이르는 상황을 일본으로서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처럼 철저히 미국 중심의 국가전략을 정립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림 14]는 매우 흥미롭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대미국 의존도에 비해 예상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교역 총량에서는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더욱 높지만, 이는 저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수입 때문이고, 오히려 일본의 주력 상품을 위주로 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대미 의존도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그리고 교역 총량 면에서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일본 GDP 대비 7%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일본경제가 매우 철저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일본경제는 교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공히 유사한 정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 전체 GDP를 볼 때 이러한 교역 자체의 중요성도 결코 절대적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일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경제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본은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중국도 또한 미국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일본은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 15]를 보면 매우 확실해진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불황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불황을 촉발시킨 계기는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가치의 추세적 절상 현상이다.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힌 반면,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확산되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이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반적 수요부진으로 나타나 자산버블의 붕괴와 경기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것이다. 문제는 그간 일본정부가 이러한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왔지만 이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경제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금은 독특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이러한 정책은 '일본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투자의 확대를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국내의 소득확대로

[그림 15] 한국, 중국, 일본의 시장환율 추이(2012년 1월=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http://ecos.bok.or.kr>, 접속일: 2016. 12. 27)의 자료를 토대로 필자 계산.

연결되게 만듦으로써 다시금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선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득과 투자확대 — 경기 상승 — 수요 및 물가상승 — 소득과 투자확대’라는 장기불황의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출발점은 국내부문이라기보다는 대외부문, 특히 환율부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내 물가의 상승을 목표로 팽창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불황의 거의 전 과정을 통해 이미 일본정부가 실시해 왔으나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새롭게 성공시키려면 우선은 대외부문, 특히 환율부문의 충격이 먼저 실현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엔화 가치의 급속한 절하를 통해 한편으로는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자를 통해서도 일본 국내의 투자와 소득을 확대시키고, 후자를 통해서도 일본 국내 물가의 상승을 유인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그림 1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12년 이후 급속한 엔화 절하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일본경제는 아직은 장기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림 15]와 같은 급속한 엔화 절하가 가능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이러한 절하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당연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미국일 것이다. 현재의 국제금융환경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따라서 [그림 15]에 나타난 엔화 절하 추세는 사실상 미국의 용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는 미국의 용인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이 그간의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거의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스스로의 불황 탈출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무엇보다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문제를 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로 불리는 해상에서의 영토문제가 좋은 사례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서로 불편한 역사문제를 현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 일본이 점점 더 중국에 양보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는 당연히 국내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의 보수화를 몰고 온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재 이러한 고령화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장·노년 세대는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경제력 규모 면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하고,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한국에 추격당하는 등 일본의 좌절 역시 경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일본경제가 호황을 누릴 당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 역사문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보였던 것과 같은 관대함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현재 이미 일종의 ‘상처 받은 민족주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의 안보질서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일본이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를 스스로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력하다면 일본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이 기회에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군사·안보 능력을 더욱 확장시키려 할 것이라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군사·안보

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군사·안보 능력 강화의 근원적 계기로 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 변화의 움직임을 하나의 위협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커다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질서 변화 움직임에 따라 미국이 일본에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일본이 그간 숙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제불황 탈출과 군사·안보적인 보통국가화가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이 동북아의 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철저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한국: 미중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앞에서와 같은 일본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동북아의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동북아의 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질서가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게 유도함으로써 중국 역시 기존의 질서에 잘 적응(accommodate)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연대 또는 협력 역시 더욱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공히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한국은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개별 FTA를 맺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군사·안보적인 동맹관계를 뛰어넘어 경제적으로도 불가분의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동북아에서 가장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서구형 시장경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시스템은 당연히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이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발전되어 온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2010년 이후 미국이 추진하는 TPP에도 가입의사를 밝혀 왔다. 물론 TPP의 논의 초기에는 이의 가입과 관련된 경제적 실익에 따른 논란으로 가입에 유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TPP의 추진 자체가 미국의 전반적 동북아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추가 가입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의 경제관계와 병행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2015년 중국과 개별 FTA를 추진한 것은 물론, 2016년에는 중국이 추진하는

AIB와 같은 새로운 국제기구에 중심적인 국가의 하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여, 2015년 현재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세 번째 직접 투자국으로 가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동북아의 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역시 함께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군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한미동맹은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의 국가존립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은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현존하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한미동맹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미동맹이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군사·안보적으로 북한을 매개로 하여 중국과 대면하고 한국으로서는 전체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THAAD와 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협력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사력 보호를 위해 THAAD와 같은 한미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체계를 발전시키지만 그것의 대상은 철저히 북한과 한반도 안으로만 국한된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군사·안보적 우려를 감안하여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 북한 및 한반도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일본과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대상은 철저히 한반도 안으로 국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처럼 일본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표 5>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현재 전체 GDP의 17%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일본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 6.5%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가까운 장래의 한국경제

〈표 5〉 대중국 경제 의존도 비교: 한국 vs. 일본(2015년 현재)

(단위: 억달러, %)

	한국	일본
GDP(A)	13,779	41,233
대중국 교역량(B)	2,274	2,698
B / A	16.5	6.5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 접속일: 2016. 12. 27).

에 있어서도 결코 바뀌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에 있어 중국에 대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현재의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모두에 있어 국가존립의 근간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에 있어 미국이 중심이 되는 동맹국들의 공동 노력에 반드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입장으로는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에 있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현재와 같이 동북아의 질서 변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에는 자칫 커다란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이들 양자와의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그 결과로 이들 양자로부터 모두 멀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보다는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고 이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 경우야 비로소 한국의 능동적 역할로 인해 한국이라는 협력적 존재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한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 사안을 북한문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 동북아 질서의 변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직접적 대상은 거의 북한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문제는 경우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협력할 가능성도 가장 높은 동북아의 사안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커다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중국이 국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북한 핵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경우 중국 역시 이러한 핵의 사정권 안에 속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등에 핵 도미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로 이러한 동북아의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 자체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친화적인 과정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은 미국과 중국의 화합과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더욱 우세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일본과는 달리 이를 둘러싼 전반적인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만일 한국이 스스로의 의도대로 미국과 중국의 화합과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이제까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정적 기여가 될 것이 분명하다.

## V. 시사점 — 동북아 질서 변화의 설명모형

본 장에서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변화과정을 경제와 안보의 동시적이고도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설명모형을 구축하려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제질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국제질서에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토론하였고, 이로 인해 동북아의 질서가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주요 4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결론을 간단한 서술모형의 형태로 정리하면 그 결과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sup>11)</sup>

현존하는 국제질서는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경제와 안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메커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실제로 이들

11)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본문에서 전개된 설명모형과 기존의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모형들 사이의 관계 또는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세계질서 및 동북아의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도 세력전이 또는 패권전쟁과 같은 다양한 이론모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들에 따라서는 현실의 전개방향에 대한 예측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론모형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이들 모형과 본문의 설명모형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토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인데, 본문에서는 현재의 동북아와 관련하여 보고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나름의 개념틀을 구성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기존의 이론모형에 대해 서술한다면 자칫 의도하지 않은 개념적인 논란에 휘말릴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이론모형을 토론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에서도 우리는 이들 기존의 모형과 본문에서 제시하는 설명틀의 관계가 추후 보다 엄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본문의 설명틀과 기존 이론모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글에 대한 익명의 검토자가 아주 유익한 조언을 주었다. 저자는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국제질서 모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발전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들 경제와 안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은 형식논리적으로 서로 등가이다. 우선 경제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질서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기능한다는 사실로부터 상징되는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의 압도적 경제력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이러한 압도적 경제력을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에 투사할 수 있는 실천적 기제로서 IMF와 World Bank, ADB와 같은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전 세계적 경제문제를 다루는 IMF와 World Bank는 워싱턴에 위치하여 사실상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ADB와 같이 지역적 경제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주도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그리고 동시에 동맹국들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각종의 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가동시킴으로써 기존의 경제질서를 세계와 지역,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모두 순조롭게 이끌어 가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안보의 경우에도 상황은 동일하다. 이 경우 국제적 안보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는 물론 아시아의 일본이나 유럽의 NATO와 같은 미국의 지역 동맹국가들에 골고루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는 경제분야에서 IMF와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가 전 세계적인 경제질서를 다루고,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ADB 같은 국제기구가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주로 다룬다는 사실과 형식논리적으로 사실상 등가이다. 더욱이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그리고 이러한 동맹국들 이외의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도 매우 촘촘한 군사·안보조약과 정책 조율 및 협의 체계가 존재한다. 국제적인 안보질서 역시 이러한 채널을 통해 순조롭게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접근’이라는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기존 질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평시에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접근하여 집중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위에서 언급했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존재했을 때에만 이들을 세계에 분산 배치하는 평시의 경우에도 기존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현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70%를 상회하며,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단독 군사비 지출이 세계의 군사비 지출 총량의 거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아직 세계적 차원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은 물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합계 국력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동북아로 한정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동북아 국가들이 체감하는 미국의 GDP는 미국의 상대적인 지리적 거리로 인해 중국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일본과 같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의 GDP를 합산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GDP가 이를 이미 초월했거나 초월하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동북아 경제 및 안보 질서에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부상은 기본적으로 경제부문에서 대외교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아시아의 해상선과 같은 바다의 교역로가 중국경제의 유지와 발전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교역로를 형성하고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교역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아시아 및 동북아에 접근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더욱 직접적인 전선(Front)이 형성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동일한 형태와 내용의 변화의 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및 동북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위안화의 국제화 노력이 시작되고, ADB 같은 지역적 국제기구와 경쟁할 수 있는 AIIB와 같은 새로운 경제기구가 중국 중심으로 창설되며, 무엇보다 아시아 및 동북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FTA와 정책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군사·안보적으로도 미국의 군사력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해군력과 미사일 등 첨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군사적 확대가 시작되고,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중국을 겨냥하여 일종의 집단 동맹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중국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적 안보협의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당연히 미국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논리적으로 일종의 반접근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로 모순적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신경을 쓰고, 군사·안보적으로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방어전략

(A2AD)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이 지속될수록 미국과 중국은 기존의 질서 변화를 둘러싸고 갈등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기존의 질서 변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 이처럼 갈등과 경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이들 양 국가에 달려 있고 이것들은 양국의 발전에도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부상하는 중국을 기존의 질서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 또한 중국으로서는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다 중국 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과 협력의 동시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경쟁의 요소가 더욱 전면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기존의 세계전략을 가다듬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동북아에 있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이 파악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균형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까지의 세계적 차원의 미국의 힘의 배치를 보다 동북아 또는 아시아에 집중되도록 재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해군력과 첨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안보적인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중국을 겨냥한 중요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TPP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상당 부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간 미국과 일본이 양두마차가 되어 추진했던 TPP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북아에 있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결코 미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군사·안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욱 많은 기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의 미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변화와 진전, 재구성 등 동북아의 여타 국가들을 포괄하는 기존 질서의 변화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신형국제관계를 내세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 미국과 더불어 중국 역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등장한 만큼 영토와 주권과 같은 핵심 이익은 서로가 보장해 주는 새로운 미중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북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집단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경제적 보복마저 실시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예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 변화과정 모두에서 철저히 미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편으로는 그간 소원하던 군사·안보적 보통국가를 건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을 끝내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더불어 군사력의 증대와 미일상호방위조약의 변경 등 종래 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에 기초하여 일본경제의 체력 회복에 필요한 첫 단추인 환율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을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북아 동맹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 수호에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질서가 중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THAAD와 한일정보보호협정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한미동맹의 사안들을 적절히 처리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로 국한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관심을 표명하고, 개별 국가로서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질서에 입각한 정책을 구사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고 중국 중심의 AIIB에 가입하는 등 호혜적 협력관계의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함으로써 단순한 미중관계의 화해는 물론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 전체의 질서에 새롭게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문제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가 될 것이다. 마치 일본이 현존하는 동북아 질서 변화의 움직임에 토대로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비약적 상승을 이루려 시도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국사회 전체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참고문헌

이석·조병구 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2017-01, 한국개발연구원, 2017.

〈웹사이트〉

OECD Stat,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6. 12. 27.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2015),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접속일: 2016. 10. 27.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http://data.worldbank.org>, 접속일: 2016. 10. 27.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 접속일: 2016. 12. 27.